

국내의 중국·북한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신 상 진**

I. 서론

II.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III.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주요 쟁점

IV.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과제와 방향

Abstract

Studies on the Relations Between China-North Korea in Korea: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Directions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esents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studies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which is one of the crucial factors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the author elaborates the several contending views on critical issues about the relations between China-North Korea.

The studies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in Korea have achieved some now, but still much place to fill up. One of the important reason why the research field still remains in a initial stage is that most of the scholars in the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affiliated institutes have difficulties to approach the informations on China-North Korea relations. Therefore, the author states that there should be more information sharing between scholars in the academic field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here should be more frequent interchanges and cooperative researches between China specialists and North Korea specialists.

Another thing which the researchers should consider is that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s not only affected by strategic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but also highly influenced by the leader's perception toward the counter countries, Sino-US relations, Sino-Korea relations, etc. Accordingly, the researchers should analyze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text.

This study also elaborates contending views on the future directions where the relations between China-North Korea should drive to, and whether North Korea will follow China'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or not, and how much China have influence on North Korea.

Key Words: China-North Korea, reform policy, China's influence to North Korea, special relationship, military alliance, North Korea's nuclear issue

*이 글은 2004년 10월 한국정치학회 주최 추계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광운대 중국학과 부교수

I. 서 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증대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에 있어서 중·북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다. 중국이 제공해주고 있는 원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중국은 3자회담과 6자회담 구도를 만들어 이를 주도함으로써 북핵위기가 증폭되지 않도록 중재하고 있다. 중·북간에 유지되고 있는 군사동맹관계와 긴 국경선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자국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중·북관계의 변화와 조정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1992년 한·중수교가 성사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북한은 냉전체제의 틀 속에서 정치·군사·안보 등 제반 영역에서 큰 흔들림이 없이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국제체제의 탈냉전화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혁명세대 지도자 사망 등을 계기로 중·북관계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다. 공통의 이데올로기적 유대관계가 지속되었던 냉전시기와는 달리 21세기에 들어 중·북관계가 취약해지고 있지만,¹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상대방을 중요한 전략협력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북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동북아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중·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북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과 전망을 다루는 연구업적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연구의 체계화와 이론화 작업을 기대하기도 요원하게 느껴지고 있다. 중·북관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적하는 전문가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한 실정이고, 이들 역시 중국의 대외관계나 북한의 대외관계를 연구하면서 간헐적으로만 중·북관계를 다루고 있다.

중·북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중·북한

¹ 사실은 냉전시기에도 중·북관계는 '분핵시기' 홍위병의 북한 비판과 북한의 대중·소 등거리의 교 등으로 인해 부침을 겪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정진위 교수의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서울: 법문사, 1985)가 권위적 연구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접촉과 교류에 대한 믿을만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중·북관계와 관련된 많은 정보가 내부 비밀자료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 중·북관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결과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중·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 사이의 관·학 정보교환 채널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경우 언어상의 제약과 중국 내 인적 네트워크 부재로 인하여 중국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고, 중국문제 연구자들은 북한의 내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양측의 배경요인을 모두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북관계를 다룬 연구 성과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중·북관계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중·북관계 연구업적들이 과거에 비해 다소 빈번하게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북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호 교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보도되는 정보들이 정확성과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용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²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국내의 기존 중·북관계 연구 성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중·북관계 연구의 주요 쟁점 검토를 통해 중·북관계 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향후 중·북관계 연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1. 구조적 연구 여건

연구기반이 잘 구축되지 않고서는 학문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하다. 특정 문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연구소, 대학, 재계의 충분한 인식과 지원이 있을 때,

² 구체적 사례로서는 1996년 일본 언론에서 최초로 보도된 후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중국의 대북 식량원조 규모와 원유 제공에 대한 정보이다. 같은 해 5월 홍성남 북한 부총리 방중 시 체결된 경제기술협력협정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게 5년 동안 매년 식량 50만 톤, 석유 120만 톤, 석탄 150만 톤을 무상 또는 우호가격으로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대부분의 중·북관계를 다루는 학자들이 경쟁적으로 인용하였으나, 이후 실제로 북한에 제공된 중국의 경제원조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하게 된다. 무릇 지역연구와 국제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서지 자료 이외에도 현지답사와 조사 및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과의 인터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열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냉전시기 국내 학자들은 북한과 중국자료를 수집, 소장하기마저도 어려웠기 때문에 극히 일부 정부 유관기관의 종사자들이 중·북관계를 분석하여 왔다. 일반 학자들은 중·북관계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냉전기 국내의 중·북관계 연구는 중앙정보부와 국토통일원 시절의 소위 공산권연구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루어져 구조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객관적 사실 분석보다는 적성국에 대한 대항논리 개발 차원의 연구였다.

그러나 국내의 학자들은 북한 자료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고 단기간의 학습을 통해서도 중국어 독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발간되는 1차 자료도 서방 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국내 학자들의 중국 진출입이 용이해지고, 남북관계 진전으로 북한 방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내 중·북관계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북관계 연구는 여전히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중·북관계 연구의 현황을 볼 때, 연구 분야의 중요성에 비해 연구자 풀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그 것도 정부 유관기관 연구자들에게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국방연구원, 국방대학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세종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 산하연구기관에서 중·북간 외교안보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 인력들이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인 제안에 의해서 중·북관계를 다루어왔다. 따라서 국내의 중·북간 외교안보관계 연구는 대체적으로 이들 연구기관의 중국문제와 북한문제 연구 인력들이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연구자가 중·북관계에 관한 업적을 내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경제통상 분야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중·북관계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북관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업적이 적었다는 점 자체가 중·북관계 연구분야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연구소 근무를 대학으로 가기 위한 중개지로 활용하고 있고 이들이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연구는 정부 부처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년간 연구기관에서 중·북관계를 다루어 온 연구자들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자료 접근의 한계 등이 겹쳐 중·북관계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국책연구기관도 수년간 중·북관계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을 대학에 빼앗겨 새로 충원한 '초보' 연구자로 하여금 처음부터 연구 자료와 경험을 축적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유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중·북관계 연구의 상당수는 비밀, 비공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많은 연구업적이 소수의 정부 유관기관에게만 배분되기 때문에 일반 연구자들의 접근이 곤란하다. 학문은 많은 정보 공개와 비판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중·북관계 연구업적이 학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분야 연구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중·북관계 연구물의 축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자료와 정보의 제약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반 학자들이 중·북관계 연구를 등한시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연구 자료상의 제약 때문이다.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북관계에 관한 정보를 일반 학자들이 수집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 행정의 공개화와 투명화 방침에 따라 많은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으나, 중국과 북한관계에 관한 정부 관련 부처의 보고서나 출판물들의 상당 부분은 일반 연구자들에게 접근과 열람이 차단되어 있다. 따라서 중·북관계 연구 시 일반 학자들은 국내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단편적인 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언론기관에서 보도하는 중·북관계에 관한 정보들의 일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선정적·과장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나, 이를 그대로 원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연합뉴스』와 국내 대규모 신문사의 북한관련 섹션을 통해 보도되는 자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이다. 『연합뉴스』 인터넷판 국제면 중국섹션을 활용할 수 있고, 『중앙일보』의 인터넷판 북한네트에서 소개하는 중·북관계 관련 보도를 참고할만하다. 『중앙일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자료도 있으나, 『연합뉴스』 기사를 받아 전재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정치·군사·외교 섹션에 나와 있는 중·북관계 관련 기사를 탐색해 볼만하다. 이밖에 북한섹션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세계일보』 인터넷판도 참고할 수 있는 정보원이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도 민족·국제 면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국내 언론사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의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CNN 등은 최근 탈북자들의 중국 유입문제와 중국의 대북한 지원 및 북핵문제에 대한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³ 북한과의 교류가 많은 중국의 경우에는 중·북 지도부간 상호 교환방문 사실에 비중을 둔 보도를 『人民日報』, 『新華社』, 『解放軍報』 등 당·정·군 기관지를 통해 대내외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언론기관의 보도는 북한과 합의된 내용만을 대내외에 알리는 수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중·북 지도부 사이에 논의된 세세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의 『로동신문』과 『민주조선』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북핵위기 발생 등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 내 관심 증대로 『朝日新聞』, 『讀賣新聞』, 『産經新聞』, 『日本經濟』 등 전국지들도 국제 면에서 중·북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들 일간지 이외에 중·북관계를 부분적으로 취급하는 정기간행물들이 있는데, 국내 자료로는 북한연구소의 『북한』,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통일한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의 『아태지역동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중·북관계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간행물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내 중·북관계 연구자가 한정되어 있는 등 연구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북관계를 다루는 해외의 간행물들도 제한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중국 외교부의 지원으로 발간되는 『世界知識』, 주간 단위로 발간되는 당 기관지 『瞭望』을 비롯하여 저명한 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現代國際關係』와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간행물 『國際問題研究』 그리고 사회과학원 산하 아·태연구소 간행물 『當代亞太』 등에서 간혹 북한문제와 중·북관계를 다루는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들 중국에서 산출되는 연구물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를 ‘충실하게’ 추종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황과 중·북관계의 실상을 표면적으로 기술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

³ Steven R. Weisman and David E. Sanger, “North Korea May Get Aid if It Pledges Nuclear Curb,”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5, 2004; Joseph Kahn and Susan Chira, “Chinese Official Challenges U.S. Stance on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June 9, 2004; Elisabeth Rosenthal, “North Koreans Widening Escape Route to China” <<http://www.nytimes.com/2002/08/05/international/asia/05ASYL.html>> (검색일: 2002년 8월 7일).

고 있다. 따라서 중국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서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 내의 다양한 시각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학문이 가장 발달한 미국의 중·북관계 연구도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다. 중국과 북한에서 발간되는 1차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서방 학자들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학자 이외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들인 브루킹스연구소, 헤리티지재단, 랜드연구소,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미국 의회연구소 등에서 중국과 북한문제들을 함께 다루는 보고서를 종종 발간하고 있지만, 중·북 관계만을 다루는 연구결과는 극히 드물다. 중국문제를 다루는 학자들이 중·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가끔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연구업적은 *The Washington Quarterly*, *Current History*, *Survival*, *Asian Survey* 등에서 간혹 발견된다.⁴

국내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로는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정보센터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중 중·북 무역동향을 참고할만하다. 그리고 국정원 웹사이트의 북한정보와 해외정보 코너 그리고 자료실의 북한자료 코너를 한번쯤은 방문해 볼만하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였던 『세계주요사건일지』가 중·북관계의 흐름을 짚어보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발간되지 않고 있다. 현안 이슈와 관련된 자료로 통일연구원의 『통일정세분석』, 외교안보연구원의 주간 『주요 국제문제분석』 그리고 세종연구소의 『정세와 정책』 시리즈를 참고할 수 있다.⁵ 이들 자료들은 온라인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중·북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종석의 『북한-중국관계』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00년까지의 중·북관계를 총괄적으로 기술한 국내의 권위적인 저술로 평가된다. 정진위의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는 중·북관계를 소련과의 전략 삼각관계의 시각에서 다룬 역작이며, 박두

⁴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Washington Quarterly*, Vol. 26, No. 2 (Spring 2003);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Close but Uncomfortable Relationship," *Current History*, Vol. 101, No. 656 (September 2002), pp. 278-283; Banning Garret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s of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28-545 등 참조.

⁵ 이들 연구소에서 중·북관계를 다룬 보고서로 이교덕·신상진,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4.5); 안효승, 『중국·북한간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이태환,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성남: 세종연구소, 2003) 등이 있다.

복이 편집한 『한국전쟁과 중국』은 중국의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원인을 분석한 저서로 꼽히며, 신상진의 『중·북관계 전망』과 오승렬의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분석』 및 박정동의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의 비교』는 각기 중·북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춰 다루고 있다.⁶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중·북관계 연구에 대한 신진학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북관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국내 연구업적으로 형혁규, 조준래, 김세곤, 방수옥, 채규철, 김희동, 김충렬 등이 있고,⁷ 중·북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석사학위 논문은 상당히 많이 산출되고 있다.⁸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답습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전망, 중·북관계의 특수성, 중·한관계 정상화가 중·북관계에 미친 영향, 중국과 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등이 주요 연구 테마로 선정되고 있다.

중·북관계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과 양국 간 교역 통계자료의 신빙성 여부이다. 중·북 교역규모에 대한 통계자료는 통일부 정보분석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정보센터에서 발표하고 있는데,⁹ 이들 모두 중국의 대북한 무역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 북한에게 유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조와 중·북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변경무역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밀거래 등이 정확하게 집계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과거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자기 지방정부의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상부에 보고하는 통계수치

⁶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2001); 박정동,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 비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이외에도 한상국,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3); 유석렬, 『북·중관계 발전과 우리의 정책방향』 (서울: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2002); 김성철, 『국제금융기구나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 베트남 경협이 북한에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조명철,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등이 있다.

⁷ 형혁규,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한양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조준래, 『중국의 대북한관계 특수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세곤, 『분단국가간 정치적 가치양립과 교류의 연관성 비교연구: 중·대만과 남북한 사례를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방수옥, 『중국의 대한 관계정상화에 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채규철, 『북한과 중국의 국가발전전략과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희동, 『북한과 중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충렬,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등 참조.

⁸ 국회도서관 전자 검색창을 통해 검색한 결과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과 북한”을 주제로 다룬 국내의 석사학위논문은 총 20건에 달한다.

⁹ 통일부는 『주간 북한동향』을 통해 중·북한간 교역내역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있다.

들을 왜곡해 왔으며, 현재도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동북삼성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통계국에 대북한 교역내용을 허위로 보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은 중국과 북한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간주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에게 각종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면서도 북한의 체면을 고려(face saving)하여 외부에 실상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왔던 것이다. 한·중 수교이후 중·북간 ‘특수한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대북한 관계상의 비공개원칙을 부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부 접촉과 교류의 실상이 외부에 알려지고 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접촉과 교류의 대부분을 일반 연구자들이 적시에 인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3. 연구 영역과 방법상의 문제

중·북관계 연구의 관심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 시기별로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 왔다. 1990년대 이전의 중·북관계 연구는 중·소 대립구도 속에서 북한의 대중정책을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시도되었다. 북한-중국-소련간 전략적 3각 관계를 통해 중·북관계의 특징과 변화 양상을 논의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부류의 연구로는 정진위의 『북방삼각관계: 북한의 대중·소관계를 중심으로』를 비롯하여 조용진의 『북한의 대중·소 동맹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은천기의 『북한의 대중·소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최명식의 『북한의 동맹정책 연구: 1950년대와 80년대를 중심으로』, 허문영의 『1980년대 북한의 대중·소정책 및 대남정책 연구: 중·소 개혁·개방화 정책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중국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시각에서 중·북관계를 분석하는 특징을 보였다.

¹⁰ 1995년 이후 중국은 북한에 제공하는 무상원조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이종석, “중국의 대북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 세종연구소 제6차 국가전략 포럼 발표문 (서울: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 2001.5.11), p. 100.

¹¹ 2003년 3월 초 첸치첸 부총리, 왕이 부부장, 푸잉 아주국장이 북한 삼지연을 비밀리에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3자회담 개최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중국은 3월 중순 한국 정부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3월 말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황이었는 데, 4월초 국내 언론기관에 유출됨으로써 비로소 중국 대표단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중국을 포함한 3자회담 개최를 설득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또한 초기 중·북관계 연구의 주요 주제로 중국의 한국전 참전 배경과 영향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있다. 이미 작고한 중국문제 대가 앨런 화이트(Allen Whiting)의 선구적 업적으로 꼽히는 *China Crosses the Yalu: The Decision to Enter the Korean War*가 1960년 발표되면서 국내 학계에서도 중국의 한국전 참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외교안보연구원 박두복 교수가 대만에서 학위논문으로 발표한 논문 『中共參加韓戰原因之研究』와 고재홍의 『한국전쟁의 원인 연구: 남북 군사력 구조의 불균형을 중심으로』가 있고, 한국전에 참전했던 중국 인사들의 회고록을 국내에 번역 소개한 저술들로 홍학지 저, 홍인표 역 『중국인이 본 한국전쟁』, 손우걸 저, 조기정·김경국 역 『압록강은 말한다』가 있다. 이외에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국내 학자들의 논문을 책자로 엮어 출간한 박두복 편저 『한국전쟁과 중국』이 참고할만한 저서이다.

이 밖에 중·북한관계를 양국의 통일정책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상근의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입장변화 고찰』, 김회동의 『북한과 중국의 통일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그리고 『분단국가간 정치적 가치양립과 교류의 연관성 비교연구: 중·대만과 남북한 사례를 중심으로』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정부 유관기관의 연구들이 다수 있는데, 국토통일원을 비롯 외교안보연구원과 통일연구원에서 주로 수행되어 왔다.

한·중 수교와 중국의 대외 개방으로 국내 학자들도 중국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1990년대 이후의 중·북관계 연구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중 수교에 따른 중·북관계 변화에 대한 연구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북한의 중국식 변화 수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이후 중·북관계 연구의 주요 관심 영역으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하고 중국과 북한의 발전노선에 괴리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중·북관계가 동맹관계에서 일반적 국가간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 성과가 산출되고 있다.¹²

1992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 하고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이 과연 중국식 시장화의 길을 따르게 될 것인지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0년 5월, 2001년 1월,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이 베이징 증관촌 IT업체

¹² 방수옥, 『중국의 대한 관계정상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준래, 『중국의 대북한관계 특수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통일연구원, 1997) 등이 있다.

와 상하이 푸둥지역 등 중국의 개혁·개방지역을 방문하여 경제 개방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됨으로써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북한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중국의 경제개혁·개방노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¹³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수용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노선 수용 가능성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¹⁴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부류의 연구들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들은 북한이 과연 중국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동유럽식의 제3의 길을 따를 것인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술한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북관계 연구의 대부분은 유사한 문제를 중복해서 다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 북한문제를 관찰하는 국내의 연구기관들은 「중·북관계 현황과 전망」과 같은 주제를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다. 연구자간에 전문연구 영역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북핵문제와 탈북자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돌출하여 새로운 연구영역에 대한 천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의 중·북관계 연구는 현상을 따라잡기에도 역부족인 듯싶다.

그러나 동유럽과 베트남 등 타 사회주의국가 사례를 통한 비교분석, 전략적 삼각관계의 분석틀 적용, 중·북의 정책결정 구조를 통한 양빈사건 분석, 그리고 최근 중국과 북한에서 발표되는 1차 자료 활용 등의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중·북관계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연구진들이 지리적 접근성, 문화적 유사성, 자료 해석상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북관계 연구의 발전 잠재력은 높다고 하겠다.

¹³ “金正日訪華, 中朝商合作,” 『文匯報』, 2000年 6月 2日.

¹⁴ Susan Shirk, 최완규 역, 『중국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서울: 경남대 출판부, 1999); 형혁규, 『중국식 개혁·개방모델의 대북한 적용 가능성 연구』; 김충렬,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박정동, 『개발경제론: 중국과 북한 비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임강택,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오승렬, 『중국경제의 개혁·개방과 경제구조: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수용 가능성과 관련』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등이 있다.

Ⅲ.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주요 쟁점

1. 특수관계의 지속과 변화

중·북관계 연구의 상당 부분은 양국관계의 미래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북관계의 변화가 한반도 안보통일 환경에 미치는 함의가 중요한 만큼 중·북관계 연구는 정책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한·중 수교를 전후한 시기까지는 중·북간 혈맹관계가 지속될 것인가의 여부가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거리로 제기되었던데 반해, 김일성과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지도부 사망 이후에는 중·북관계가 특수한 관계에서 벗어나 전략적 협력관계 또는 일반 국가간의 관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논의들이 등장하였다.

일부의 연구는 한·중 수교와 혁명 1세대의 정치 일선 후퇴에도 불구하고 중·북한 간 동맹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이들 주장의 주요 논거는 중국과 북한 간의 이념적·체제적 유사성과 혁명세대 지도자의 건재 그리고 북한이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 및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들에서 찾을 수 있다. 중·북 간 전통적 혈맹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주장은 대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내적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다.¹⁵

그러나 다수의 중·북관계 연구자들, 특히 국제환경 요인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경우는 중·북 간 혈맹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을 보인다.¹⁶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국가이익이 중시됨에 따라,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감내해야 할 막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 대내 경제발전을 최우선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정책 방향 전환은 강대국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고 평화와 발전이 국제질서의 양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북한 지도자 역시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더 이상 중국을 확실하게 믿을 수

¹⁵ 유석렬, 『중·북한관계의 현황과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2).

¹⁶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pp. 288-299; 김재철, “북한·중국간 외교관계: 특수관계에서 보편적 관계로,” 윤정석 등, 『통일환경론』 (서울: 오름, 1996), pp. 169-200.

있는 맹방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주의 배신자”로까지 지칭하고,¹⁷ 미·일·러 등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함으로써 국제고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만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과도 경제 및 정치외교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정부 공식문건에서 북한을 더 이상 피로 맺어진 혈맹국으로 지칭하지 않고 전통 우호협력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북 간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¹⁸ 중·북 모두가 상대방과 협력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할 전략적 필요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내 경제건설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중국은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일반 중국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국의 지도자들도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보지 않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북 간 군사동맹조약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물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북 간 동맹관계는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⁹ 중국에서 발간되는 중·북관계에 대한 연구업적들 거의 모두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때, 최근 중국정부 유관 연구기관 학자에 의해서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논문들이 공개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중국 내 북한에 대한 인식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²⁰

2004년 9월 19일 중국공산당 제16기 4중전회를 계기로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 주석을 승계함으로써 중국이 후진타오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후진타오시대 진입이 중·북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²¹ 1989년 천안문사

¹⁷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4일; 신상진, “중국의 대북한 정책: 정책변화 요인과 주요 사안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3집 (1999), p. 204.

¹⁸ 2004년 10월 6일 중·북 수교 55주년을 기념하여 후진타오와 김정일을 비롯한 양국 지도자들은 축전을 교환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양국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전통적 친선협력관계로 지칭하였다. “中朝領導人互致賀電祝兩國建交55周年”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900122.html>> (검색일: 2004년 10월 6일).

¹⁹ 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 중·북 간 군사동맹조약에 의거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고, 중국은 군사동맹을 통한 안보정책을 냉전시기의 안보개념으로 폄하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신상진,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50.

²⁰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奕,” 『世界經濟與政治』, 2003년 第9期 (2003.9), pp. 53-58; 王文忠, “以新視角審視朝鮮問題與東北亞形勢,” 『戰略與管理』, 2004년 第4期 (2004.8) 참조.

²¹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들로 충원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이 대미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중·북관계의 변

건 이후 장쩌민이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후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난 것과는 달리,²² 후진타오의 경우는 이미 1992년부터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후진타오의 중앙군사위 주석직 승계가 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후진타오가 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합의를 통해 대내외 정책을 결정하는 스타일을 보여 왔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 정치체제의 제도화 진전은 중국의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중국 내 권력구조 변화보다 북한의 변화와 미국의 동북아정책 등 대외 환경변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동북지역의 안정과 발전 도모,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대비 그리고 대만문제 해결을 위해 후진타오는 북한과 전략적 협력지속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중국은 동북공정과 동북진흥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과 긴밀한 접촉과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통해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을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중·북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대일본, 대러시아, 대남한 정책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북한 역시 미·일·유럽과 관계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체제안보에 도움이 되고 대미·일관계 개선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중·북 간 전략적 협력은 유지될 것이다.

2.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수용 가능성

북한의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였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되고 자연재해 등이 겹치면서 1990년대 들어 북한경제의 위기상황이 고조되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아사하고 배급체제가 무너지는 등의 혼란이 조성되자 과거 자력갱생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도 합영법을 제정하고 분조도급제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병광은 16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지도부 개편이 중·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지도부개편과 중·북관계 전망,” 『국제문제연구』, 제3권 제2호 (2003년 여름), pp. 220-223.

²² 장쩌민은 1989년 천안문사건 직후 상하이시 당 서기에서 중앙당 총서기로 발탁된 후 비로소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장쩌민 등장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다.

등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중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중국의 개혁·개방 성과를 시찰하는 노력을 보이게 되었다.

북한 경제상황의 악화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험적 노력들은 외부 관찰자들로 하여금 북한이 과연 성공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개혁·개방모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국내 중·북관계 연구자들의 가장 많은 연구가 이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학자들 간에 북한이 중국의 발전노선을 답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종석은 1984년 합영법, 1993년 합작법 제정, 1991년 나진·선봉 경제특구 지정 및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 개시 등 북한이 추구해 온 조치들 모두가 중국처럼 제한된 지역을 선택적으로 개방하여 개방의 결과가 체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한도로 차단하면서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중국식의 발전노선이라고 보고, 북한도 결국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³ 박정동도 이러한 견해에 대체적으로 공감한다. 그는 개방과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여 성공을 거둔 중국과 달리 북한이 나진·선봉지역과 신의주지역 그리고 개성공단 등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개방정책에만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한이 현재의 위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중국식의 노선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²⁴

북한이 베트남이나 동유럽식 개혁·개방모델을 수용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철은 북한이 베트남과 경제체제 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는 데에 동감하면서도 베트남처럼 해외자본의 유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의존하여 경제난을 극복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²⁵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를 역임한 조명철은 구동구권의 경제체제 전환 경험을 북한경제 변화모델로 직접 상정할 수는 없지만, 체제전환 이전의 구동구권과 유사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 동구 사회주의국가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추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²⁶

필자는 1992년에 잡필한 저서를 통해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수용 가능성

²³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pp. 299-303.

²⁴ 박정동, 『北韓의 經濟開發戰略에 대한 一考察』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0), pp. 121-124.

²⁵ 김성철,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²⁶ 조명철, “구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사례와 북한의 진로,” 통일부 정보분석국 주최 내부세미나 발표문, 2001년 2월 13일.

을 전망하였는데, 북한은 중국과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개방을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²⁷ 북한은 중국의 경우와 달리 김일성의 유훈에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 김일성의 경제정책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⁸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통치를 지속하는 한 북한이 김일성시대의 폐쇄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 내에 김정일에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개혁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이 대외 개방으로 인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지리적 중심이 깊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들은 북한에게 중국식 경제발전 정책을 답습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⁹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이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추종하게 될 경제개혁·개방의 방향은 중국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2000년 5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경제 발전상에 감탄하고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옳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사실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발전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노선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북한 김정일이 중국의 개혁·개방론자들을 ‘사회주의 배신자’로까지 비판해 왔고, 외국자본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대신 체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개혁에는 극도로 조심스런 자세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 같은 속도와 깊이로 개혁·개방을 동시에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²⁷ 신상진, 『중국의 개혁·개방 현황과 전망: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수용 가능성과 관련』, pp. 90-116. 홍면기도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기,” 『통일정책연구』, 13권 1호 (2004.7), pp. 39-40에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논조를 전개하고 있다.

²⁸ 중국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1981년 말 중국공산당 제11기 6중전회에서 ‘역사문제 결의’를 통해 마오의 정책과 지도지침에 대한 철저한 평가작업을 거쳤다. 중국공산당은 마오의 정책 중 30%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사상해방을 주창하면서 개혁·개방의 이론적 기반을 확고히 제공하였다. 『關於建國以來若干歷史問題的決議』(香港: 三聯書局, 1981), pp. 1-58.

²⁹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미국은 북핵문제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력에 비중을 두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을 답습함으로써 중국에게 과도하게 종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3.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이다. 1992년 한국정부가 ‘북방정책’ 이름 아래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실현한 것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였고, 10여년이 지난 현재 북한 핵 위기를 대화로 해결하는데 중국의 외교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한·소 수교이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발언권이 급격하게 약화된 것과 달리, 한·중 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자산은 김일성과 덩샤오핑 등 혁명 1세대 지도부간 인적 유대관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변함없는 정치·경제·외교적 지원정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북한 1세대 지도부 사이에는 항일전과 한국전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지애가 형성되었고, 1980년대까지도 양국 지도부간 긴밀한 유대관계는 큰 동요 없이 유지되었다. 1953년 한국전 종전 직후 방중한 김일성에게 마오쩌둥과 조우언라이는 북한이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도록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이 취해야할 응분의 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1970년대 초 중국이 미국과 국교정상화 협상을 전개할 때에도 조우언라이는 위암으로 통증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미국과의 협상내용을 소상하게 통보해 주었다. 김일성과 중국 지도자간에 맺어진 끈끈한 관계는 1976년 김일성이 조우언라이 사망을 접하고 수술하면 눈물을 흘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눈 수술 계획을 뒤로 미룰 정도로 강력하게 유지되었다.³⁰ 중·북간 중대 사안 상호 통보 전통은 1992년 한·중 수교 발표 직전 중국군부 실력자로 군림하였던 양상쿤 국가주석의 방문을 통해서도 유지되었다. 인치의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중국과 북한에게 있어 지도부간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김일성과 마오쩌둥, 조우언라이, 덩샤오핑 등이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으로써 양국 지도부 사이에 존재해 왔던 인적 유대관계로 인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더욱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은 중국이

³⁰ 楊明偉, “比金子還貴重的友情: 周恩來與金日成,” 『瞭望』, 1998年 第17期 (1998.4), pp. 22-23.

북한에게 제공해 주는 전략물자가 북한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³¹ 필요할 경우 중국이 전략물자 제공 카드를 이용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권고와 설득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최소한 90% 이상의 석유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해외 도입 식량의 거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전략물자 공급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2003년 2월 중국이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3일 동안 대북 송유관을 차단한 후 북한이 미국과 양자회담만을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중국이 권유한 3자회담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에서도 잘 나타났다. 3월 8일 첸치첸 중국 외교담당 부총리가 북한 삼지연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에게 다자회담 수용을 권유하였고, 김정일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개최될 수 있었다.

전략물자 공급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북핵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2003년 7월 중순 파이팅귀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시 디젤유 1만 톤 제공 등 원조계획을 밝힌 후 북한이 1차 6자회담 참여를 밝힌 바 있고, 우방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김정일에게 300억 원(2억 인민폐)에 이르는 무상지원을 약속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2차 6자회담에 참석하도록 유도하였던 사실, 그리고 2004년 4월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이 대북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후 북한이 3차 6자회담에 참가하였던 사실들 모두가 중국의 대북 전략물자 지원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유지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발언권이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³²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차 북핵위기 발생이후인 2002년 12월 27일 탕자쉬엔 중국 외교부장이 주중 북한 대사관을 방문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이튿날 외무성

³¹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김태호, “탈냉전기 중국의 대북 영향력 동향과 전망,” 『국방논집』, 제42호 (1998년 여름)이 있다. 재미 한국학자 Victor Cha와 David Kang도 중국의 대북한 전략물자 제공으로 인하여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The Korea Crisis,” *Foreign Policy* (May/June 2003), p. 23.

³² Andrew Scobell, “China and North Korea: The Limits of Influence,” *Current History*, Vol. 102, No. 665 (September 2003), pp. 274-278.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만일 다른 나라들이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안전보장 담보를 주고 대화에 나서도록 요구하거나 그렇게 못하겠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³³ 이는 북한이 중국의 우려 수용을 거부한 행동이었다. 또한 2004년 9월 리장춘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1만 톤의 원유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차 6자회담 시 약속했던 9월 이내 4차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였다. 2003년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의 선지루 박사가 중국의 저명 국제문제 학술지에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중·북 군사동맹조약 폐기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논지를 주장한 것도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³⁴

IV. 중국·북한관계 연구의 과제와 방향

중·북관계의 변화에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국내 중·북관계 연구가 정책적 지향성을 갖는 것은 불가피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중·북관계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³⁵ 중국 내 탈북자문제,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의 변화에 주는 함의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안을 둘러싼 중·북관계에 대한 정치외교·안보적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중·북관계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이 곤란하다는 점이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체라고 한다면, 연구자들 사이에 중·북관계와 관련한 정보의 공유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밀을 요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관·학간 협조와 교류가 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³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담화,” 『로동신문』, 2002년 12월 30일.

³⁴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 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奕.”

³⁵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 연구들은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적지 않게 수행되고 있다. 박두복,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3.6); 박병광,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 『동아연구』, 제46집 (2004.2), pp. 139-164; 문홍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과 정책 기조,” 『중소연구』, 27권 3호 (2003), pp. 99-116 등 참조.

북한의 관점에서 보는 연구와 중국의 입장을 동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중·북관계 연구업적의 대부분은 북한의 시각 또는 중국의 관점 중 한쪽에 치우친 연구들이다. 북한 전문가의 경우 북한에서 간행된 자료에 근거하여 중·북관계를 분석하는 반면, 중국 전문가들이 진행해 온 중·북관계 연구 업적물은 중국적 관점에서 관찰·분석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양자관계를 어느 한 나라의 관점에서만 다루게 될 때, 종합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전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와 북한 전문가 사이의 공동 협력연구 또는 상호 교류의 기회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중·북관계 연구가 단편적이고 현안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었는데, 체계적이고도 분석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술 위주의 연구에서 실증적 연구 도입이 요구된다. 북한체제가 폐쇄적이라는 사실과 중국이 여전히 대북관계에서 상당부분을 비공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³⁶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의 강도와 한계에 대해 실증적인 통계수치 등을 활용한 연구시도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³⁷ 중·북관계도 양국의 정치외교·안보적 고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국 지도자의 성향과 인식,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부구조, 경제·사회적 특징 그리고 국제질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북관계를 양자관계 차원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중·미관계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중·러관계 등 국제관계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중국의 대북정책이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³⁸ 중국 내 한반도문제 실무자 중 일부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외교경험을 축적한 인사들로 충원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사회의 다원화 추세와 더불어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앙당과 정부 이외에 지방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중국 내 탈북자문제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중국 외교부와 공안기관 사이의 이견 노출 등 부처

³⁶ 최근에는 중국이 북한과의 접촉 내용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 등에게 통보해 주고 있다. 2004년 4월 김정일 방중 시 김정일과 중국 지도부간 대화 내용이 중국과 북한에 의해서 공개된 것을 통해서도 중·북관계가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³⁷ Bruce Russett, Harvey Starr, David Kinsella, *World Politics: The Menu for Choice*, 6th ed. (St. Martin's, 2000), pp. 3-22.

³⁸ 중·미는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중·미의 최고 지도자와 외교안보 관료들 사이에 빈번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간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 그리고 후진타오 시대에 들어 여론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중·북관계 연구 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새로운 영역이다. 중국과 북한 대외정책 구조의 변화상을 감안한 현실성 있는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